

2005.12.16(金)

檢 討 報 告 書

(第145回 定例会)

遠 城 郡 議 會
専門委員 文乙姫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사회복지분야 등 신규사무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기구정원규정 개정예 따라 부읍면장 직제 신설에 따른 정원 일부조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수없는 군정추진으로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예 따른 조직 관리 지침 【시 기획관실-4892(2005.11.4)】

3) 주요내용

- 총 정원을 648명에서 653명으로 5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집행기관 : 643명 (종전 638명 : 증 5)
 - 일반직 5명 (6급 2, 7급 2, 8급 1)
-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안 제3조)
 - 본청 : 344명 \Rightarrow 351명 (증 7)
 - 6급 Δ 3, 7급 +2, 8급 +1, 9급 +7
 - 읍 : 93명 \Rightarrow 91명 (Δ 2)
 - 6급 Δ 1, 8급 +3, 9급 Δ 4
 - 면 : 105명
 - 6급 +6, 8급 Δ 3, 9급 Δ 3

4. 검토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2005.10.20 대통령령 제19091호)에 따라 부읍면장 직제 신설에 따른 정원 일부조정 및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제3호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인구 3만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 현재 공무원 정원(제137회 2005. 2)
 - 648명(집행기관 638명, 의회 10명)
- 증원된 정원(증원 5명)
 - 653명(집행기관 643명, 의회 10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1.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200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당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3) 주요내용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 200명을 하한선으로 한다.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2005. 1. 27법률제7362호)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 2006.1.1)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시행일 : 2006.1.1)

- 개정조례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1.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2005.3.18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안 제23조)
- 공무원이 종사 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 (안 제26조)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27조)
-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 (안 제28조)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2005.3.18 대통령령 제18739호, 2005.6.30 대통령령 제18894호)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2005. 7.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제1항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
 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 개정조례안 제13조(근무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참조
- 개정조례안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참조
- 개정조례안 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참조
- 개정조례안 제16조의 2(토요일휴무제)
 - 삭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 당해년도 연가일수 초과시 ⇒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가능(2분의1 범위내)
 - 2006. 1. 1부터 시행

○ 개정조례안 제23조(특별휴가)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제3항 단서신설)
-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폐지(제6항~제9항)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 축소 (1~3일) [별표3] 참조
- 2006. 1. 1부터 시행

○ 개정조례안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목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

○ 개정조례안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한 것임(신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참조

○ 개정조례안 제27조(겸직허가)

- 공무원이 제26조 외 다른직무 겸직시
⇒ 군수의 사전허가 득해야 함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참조

○ 개정조례안 제28조(공무원의 범위)

-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신설)

부 칙

○ 제2항(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 제23조제7항 ⇒ 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 12. 31일 기준, 20년이상 재직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미사용자에 대하여 2006. 6.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하여야 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지지방산업단지 및 다사죽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1개 필지의 개발용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치하는 등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사전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근 거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에관한규칙

3) 주요내용

- 다사죽곡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행정구역중 죽곡1리, 죽곡2리 일부를 매곡2리로 조정(별표)
- 달성2차산업단지내 행정구역 중 구지면 창1리 일부를 응암2리로, 응암3리, 유산리, 내리 일부를 예현리로 조정(별표)

4. 검토보고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기간 : 2005. 8. 10 ~ 2005. 8. 29

- 의견 있음 : 별첨내용 참조

- 다사 죽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행정구역 중
 - 죽곡1리, 죽곡2리 일부 ⇒ 매곡2리로 조정
- 달성2차산업단지내 행정구역 중
 - 구지 창1, 2리 일부 ⇒ 응암2리
 - 응암3리, 유산리, 내리1, 2리 일부 ⇒ 예현리로 조정
- 현재 우리군의 “리장” 정수는 “229리”로서 변동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 등장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선코자 하며,
-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갈수록 다양화됨에 따라 품목 및 종류를 세분화 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63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 주요내용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인하 및 지급건수 제한
 - 신고포상금 하향조정 : 25천원 \Rightarrow 과태료의 10%(3천원)
(안 별표4)
 - 포상금 지급건수 제한 : 1인 월 50건 이내 (안 별표4)
- 「담배꽂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인하에 따라 관련된 조항에 대해 동시에 조례 정비
 - : 과태료 5만원 \Rightarrow 3만원(안 별표4)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종류 세분화
 - : 29품목, 57종류 \Rightarrow 95품목, 152종류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으로 인하여 본래 취지와 상반되어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 됨에 따라 품목·종류를 세분화 한 것임.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56호, 2005.2.5) 일부개정에 의함.

- 「별표4」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14조의2 관련)

- 과태료 하향 조정

- (담배꽂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 3만원으로 인하

- 포상금 (하향 및 지급건수 제한)

- 과태료의 50% (25천원)

⇒ 과태료의 10% (3천원, 1인 월 50건 이내 지급)

-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8조 관련)

- 29품목·57종류 ⇒ 95품목·152종류로 세분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제256호.2005.2.5)
일부개정에 따라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꽂초·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 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
하기 위함.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63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3) 주요내용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휴지 등)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
· 5만원 → 3만원으로 인하함 (안 별표1)

4. 검토보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됨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3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1.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3) 주요내용

- 방재단은 단장1인, 간사1인,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 함 (안 제4조)
-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 함 (안 제7조)
-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함 (안 제8조)
-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함 (안 제9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0조)
-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3조, 제14조)
-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안 제16조)

4. 검토보고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으로 (2005. 1. 27 법률 제 7359호)“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2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례안 제1조(목적)

○ 조례안 제2조(설치)

○ 조례안 제3조(명칭)

○ 조례안 제4조(조직)

-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
- 단장 ⇒ 단체대표,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군수가 위촉
- 간사 ⇒ 단장이 지명
- 단원 ⇒ 개인단원, 단체단원 ⇒ 가입신청서 제출

- 참가자격
 - 군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단장이 필요시 타지역 거주 개인·단체 가능
- 읍·면단위 방재단 구성
- 읍·면 지역 자율방재단원은 달성군 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름
- 읍·면 방재단 대표 ⇒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

○ 조례안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 단장 ⇒ 방재단 업무 총괄, 방재단 대표
「달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참석 의견 제출
- 간사 ⇒ 방재단 회계담당,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 담당
- 단장, 간사, 대표 임기 ⇒ 3년, 연임 가능

○ 조례안 제6조(해임)

- 단원의 해임사유 발생 시 해임
 - 사망, 소재 불분명
 - 군외 지역 이주
 -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 직무태만, 의무 불이행시
 - 부정한 행위·비리 등으로 명예 훼손시

○ 조례안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 방재단의 정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 방재 협의회를 구성
- 구성원 ⇒ 방재단장, 방재단 참여 민간단체대표, 읍·면대표, 전문가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집 ⇒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 건의에 의함
- 회장 ⇒ 단장이 맡음
- 임무 ⇒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대책논의, 인력·장비·물품등 군수에게 지원 요청
-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정책 ⇒ 군수에게 건의

○ 조례안 제8조(임무)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결정
- 방재단 주요 임무 ⇒ 1~10목 참조
- 타 지역 피해 발생시
 - ┌ 인원·장비 등 지원가능
 - └ 지원범위·시기·규모 등 협의회에서 결정
- 단장은 방재단을 기능별·반별로 임무 세분화

○ 조례안 제9조(소집)

- 방재단 소집 ⇒ 단장, 군수 소집시 ⇒ 단장과 사전협의
- 소집 방법 ⇒ 전화, 가능한 통신수단, 마을애플 등 이용
-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불이익 당하지 않음
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둠

○ 조례안 제10조(운영등)

- 단원이 임무와 관련한 활동을 한 때
⇒ 활동완료시 활동확인서 제출
- 매분기 1회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작성
⇒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제출자료를 방재정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등
자료 활용
-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
 - └ 임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 └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 소요비용
 - └ 사무실 운영비 등

○ 조례안 제11조(금지행위)

- └ 기부금 모금, 영리목적 행위
- └ 정치활동 행위
- └ 소송분쟁 또는 쟁의참여 행위
- └ 명예훼손 행위

- 조례안 제12조(출입증 발급)
 - 단원은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 소지
- 조례안 제13조(교육)
 -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 ⇒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
- 조례안 제14조(훈련)
 - 방재단 자율로 실시
- 조례안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 군수·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조례안 제16조(감독)
 -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조례안 제17조(시행규칙)

부 칙

-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폐지규정) 「대구광역시달성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

※ 2006년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예산(안) : 7,000천원

| | | |
|------|-------------------------|---------|
| p483 | ┌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급식비 | 5,000 " |
| | └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상해치료비 | 2,000 "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5. 12.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 있는 다사읍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 중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먹거리 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

2)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주요내용

- 다사소도읍 육성사업 중 먹거리 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 지번 : 다사읍 부곡리 256, 257, 259번지
 - 면적 : 3,643m²(1,102평)
 - 매입예상가액(공시지가) : 76,985천원(평당 70천원)

4. 검토보고

- 다사소도읍 육성사업 중 먹거리 단지 주차장 부지매입

- 매입대상현황

(단위 : m², 평, 천원)

| 재산의표시 | | | 취득수량 | 공시지가 | | 소유자 |
|----------------|--------|----------------------|------------------|--------|--------|--------------------------|
| 지번 | 지 목 | 지적(평),m ² | | 단가(원) | 금액 | |
| 계 | | (1,102) 3,643 | (1,102) 3,643 | | 76,985 | |
| 다사읍 부곡리 256 | 답 | (262) 866 | (262) 866 | 21,000 | 18,186 | 다사읍 부곡리 147 이근택 |
| 다사읍 부곡리 257 | " | (754) 2,493 | (754) 2,493 | 21,000 | 52,353 | 대구 중구 남산동 2931-14 홍해열 |
| 다사읍 부곡리 259 | 전 | (86) 284 | (86) 284 | 22,700 | 6,446 | 대구 서구 내당동 911-94 손경애 |

-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 중 부곡리 일대의 먹거리 단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임.